

참여정부 1주년
핵심공약
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2004. 3. 4

국무조정실
관계기관합동

-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제16대 대선공약 1,332건중 참여정부에서 역점 추진해야 할 핵심공약(177개)을 선정
- 청와대와 총리실은 177개 핵심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관리해 오고 있음 (대통령 지시사항, '03. 4. 1)
- 「참여정부」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핵심공약 추진상황을 점검·평가하였으며
 - 특히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행정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개선노력을 경주할 필요

I . 공약 추진경과

◆ 공약관리에 관한 대통령 지시 내용('03.4.1, 국무회의시)

- 청와대와 총리실은 핵심과제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계획 수립하고 예산소요가 과다한 것은 현실적인 방안 마련
- 그 외의 공약은 합리적으로 재평가하여 협의·추진

□ 추진체계

- 총 1,332건의 공약사항을 실현가능성·중요도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분류
 - ① 핵심공약(177개)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
 - ② 중점공약(553개) 및 일반공약(602개)은 각 부처에서 자체관리
- 공약관리체계
 - 대통령비서실 : 공약추진 및 관리에 관한 총괄·기획
 - 국무조정실 : 실천계획 종합, 과제조정, 반기별 점검·평가
 - 기획예산처 : 예산수반 과제에 대한 검토 및 지원
 - 각 부처 : 소관공약 계획수립·추진, 분기별 자체점검

□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예산검토

- 177개 핵심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('03.5.10)
-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에서 일괄 검토('03.6)
 - 총 64건의 예산수반 공약을 즉시추진(10), 사전 준비후 추진(38), 이견 조정후 추진(6), 중장기 검토(10) 과제로 분류
- 177개 핵심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수립 확정 및 대통령보고('03.7.25)
 - ※ 정치개혁 공약(15건)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관리

Ⅱ. 점검결과 종합

국무조정실에서 35개 중앙행정기관(부처, 위원회, T/F)을 대상으로 핵심공약 17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종합점검 하였음

□ 핵심공약 17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한 결과,

- 33개 과제가 완료되고, 130개 과제가 정상 추진중으로서, 92%에 달하는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
- 그러나, 14개 과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미흡하여 앞으로 부처의 자체 개선노력과 부처간 정책조정·협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

※ 정상추진이지만 일부 추가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31개로 나타남

<추진상황 총괄>

계	완료	정상추진		부진
		진행중	추가보완필요	
177개	33개	99개	31개	14개

□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비교해 보면

- 사회·복지분야, 통일·외교분야에서 추가 보완·조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이 나타남(교육·문화 분야도 중장기 과제가 많음)

※ 참여정부 초기 국민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이해당사자간 이견노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부진

<분야별 추진상황>

(단위 : 개)

분야별	계	완료	정상추진		부진
			진행중	추가보완필요	
경제	23	5	10	6	2
교육·문화	64	11	46	4	3
사회복지·행정	60	15	30	8	7
통일·외교	30	2	13	13	2
합 계	177	33	99	31	14

※ 붙임 : 4대분야 및 12대 국정과제별 공약추진현황

Ⅲ. '03년도 추진성과 및 과제

'03년도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,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경쟁력 강화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기반(법·제도·로드맵 등)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

1 주요 추진성과

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
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, 지방분권특별법,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('03.12) 《111》 《124》 《126》
- 주민투표법을 제정('03.12)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양여금관련 제도 개선 《119》 《123》
 - ※ 지방양여금제도 폐지, 교부세율 인상(15.0%→18.3%), 특별교부세 축소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
-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(국가균형발전특별법)를 마련하고,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방대학 육성시책을 수립·추진 중 《112》

②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경쟁력 강화

-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 선진화관련 법정비('03.12)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('04.1) 《103》 《97》
- 변칙적인 상속·증여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속·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(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, '03.12) 《106》
- 한·칠레 FTA 체결 및 FTA이행특별법, 농어촌복지특별법 등 제정 《61》 《62》
- 5~10년후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신성장동력 10대 분야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《4》

③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

- 대통령 비서실에 「정보과학기술보좌관」 신설('03.2) 《13》
-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「이공계지원 특별법」('04.3)을 제정하고 《14》
 - 우수업적 과학기술인에 대해 매년 생활보조금 지급 등 평생지원체제 구축 《14》
 -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확대(211개 기관 269명) 및 군 복무기간 단축(5년→4년이내) 등 추진 《11》 《12》

④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

- 근로기준법을 개정('03.8)하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《93》
 - 주5일제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('03.12) 《94》
-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('03.8)을 통해 합리적 외국인 고용체계 마련 《40》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('03.12)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지속적 확대('03년실적 : 58만호) 《157》 《158》
- 참여복지 5개년계획('04~'08)을 수립하고 《155》
 - 지역·직장 건강보험의 재정통합('03.7) 《135》
 - 유아교육법 제정('03.12) 및 취학전 아동의 무상보육 및 교육 단계별 확대 등 추진 《151》
- 인구·고령 사회대책 기획단을 설치하여 향후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주요과제(20개 과제)에 대한 국가 실천 전략 수립 《150》

⑤ 그밖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(다면평가제, 기능정비 추진 등),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마련,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국정시스템 혁신 추진 《82》 《85》 《87》 《116》 《68》

2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부진한 과제(14개)

① 관계 부처간 협조 또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(3개)

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(보건복지부) 《144》

- 국회계류중인 동법 의원입법안에 대해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 요구와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합의도출 불투명
 - 의료계 : 형사처벌 특례,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 등 요구
 - 법무부·예산처 등 : 위헌소지, 민법원칙 위배 및 정부부담 우려
- ⇒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안을 마련토록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이견조정

② 문화재보존기금 설치(문화재청) 《28》

- 정부에서 기존 기금의 통·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새로운 기금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추진 어려움
- ⇒ 현재 경제여건, 정부방침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·장기 과제로 추진
- ※ 문화재보존기금 신설과 별도로 ‘복권 및 복권기금법’에 기금의 용도로서 ‘문화유산보존사업’ 포함 (’04.1월)

③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(교육인적자원부) 《38》

- 학력차별은 교육적 측면이외에 복합적, 사회·문화적 요인에 기인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지연
- ⇒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관계부처 협조 필요

② 이해관계인 설득과 대국회 협조강화가 필요한 과제(6개)

④ 재정건전화관련법 제정(기획예산처) 《80》

- 세계잉여금처리방법, 국가채무정의조항 등 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하여 여야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 및 논의 부진으로 입법 지연

⇒ 국회입법 추진과는 별도로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가 재정관련 법체계 개편 작업을 병행하여 추진

⑤ 통합도산법 제정(법무부) 《98》

- 회생절차의 관리인 선임문제 등과 관련하여 은행 등 관련 단체의 이견에 따라 국회 법안심사 장기화

⇒ 관련단체 이견조정 등 통합도산법을 조속 입법 추진

※ 통합도산법 중 개인회생부분만 분리한 「개인채무자 회생법안」
(의원입법)국회 통과('04.3)

⑥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(보건복지부) 《147》

-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확정,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('03.10),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

⇒ 17대 국회에 대비하여 사전 정지작업 철저

⑦ 언론산업 선진화 (문화관광부) 《95》

- 신문 소유지분 제한, 온라인 신문의 규제문제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이견으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('02년 국회제출) 국회 계류중

⇒ 언론계, 학계, 시민단체 등 언론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노력 적극 진행

⑧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수립 《36》 (국가인권위원회)

⑨ 사회적차별금지및시행에관한특별법 제정 《39》

- 법의 성격, 차별범위, 구제수단 등에 관한 각부처·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지연

⇒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적극적 협의 및 조정작업 조속 진행 촉구

③ 사회 각계, 특히 법조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(3개)

⑩ 감사원 기능의 국회이관(감사원) 《66》

-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임

⇒ 감사원 기능이관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 및 법조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

⑪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(법무부, 부방위) 《70》

⑫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(법무부) 《76》

- 사회 각계 및 법조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

⇒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입 방안 검토

④ 추진 여건 미성숙 및 국제 정세에 기인한 부진과제(2개)

⑬ 북한 핵문제 해결(통일부, 외교통상부) 《176》

⑭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(통일부, 외교통상부) 《175》

-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 2차 6자회담이 2.25부터 개최

- 미사일 등 WMD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협의 계획

⇒ 남북한 대화 및 관련국가와의 적극적 외교노력 지속

IV. '04년도 추진계획

금년도에는 지난해 마련한 참여정부의 각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, ② 국민통합과 민생·복지 현안과제, ③ 주요 국정과제 관련 공약에 중점을 두어 추진

1 중점추진 과제

- ①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과 관련된 핵심 공약 과제를 최우선 추진
 - 2008년까지 연평균 5%성장으로 20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(2.19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) 《131》
 - 세계최고의 디지털 강국을 실현하고 《5》
 - 기초과학 연구투자 확대, R&D 예산 지속 확대, IT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, BT·NT분야 등 새로운 기술분야 집중 육성 《2》 《4》 《10》
- ② 국민통합 및 민생 복지 현안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보완해 추진 《159》
 - 국민임대 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《159》
 - 「사회적차별금지및시행에관한특별법」 제정 추진 《39》
 -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《90》
 - 차상위 계층 의료 급여 및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단계별 확대 《154》 《151》
 -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체계구축, 응급센터 인프라 확충 《133》 《143》
 - 식품안전관리 일원화, 사전 예방원칙 도입 등을 위한 「식품안전 기본법」 제정 추진 《79》 《77》

③ 국정과제 관련 공약은 대통령자문위원회 및 T/F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

- 정부혁신·지방분권위원회: 정부조직 개편 및 정부 기능 효율화, 자치경찰제 도입 《89》 《121》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: 수도권 토지관련 제도정비, 기업 지방이전 촉진,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《125》 《128》 《129》
-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: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, 동북아 경제 협의체 구성,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 《56》 《50》 《51》
- 빈부격차·인구고령사회 대책팀: 차별시정위원회 설치, 고령화 대책 기본법 제정 《37》 《146》

2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대책 강구

① 입법추진 과제, ②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, ③ 이해관계자 갈등 과제, ④ 주변 국제정세 관련 과제 등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대응

① 입법 추진 관련 과제 ⇒ 국회 협조강화 및 이해관계인 설득 강화

- 통합도산법 제정 《98》
-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《147》
-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 등 《43》

②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 ⇒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 추진

-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,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, 부산신항·광양항 확충 《55》 《57》 《52》
- 신행정수도 건설, 호남고속철 신설 등 국책사업 《111》 《109》
- 지방대학 집중육성 및 연구역량 강화, 대학의 특성화·다양화 《114》 《23》

③ 이해관계자간 갈등 예상과제 ⇒ 체계적인 의견 수렴 및 관리 강화

- 소비자 집단 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《108》
-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요율의 단계적 현실화 《134》
-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《30》
- DDA 협상에 적극대비, WTO/FTA 협상에 따른 관련대책 강구 《49》 《64》

④ 남북 현안과제 등 ⇒ 향후 북핵문제 등 국제정세를 감안하여 남북관계 내실화 추진

- 개성공단 시범단지 건설 완공 및 기업입주(금년내) 등 남북 경제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 《162》 《168》
- 남북회담 정례화 및 교류 활성화 등 남북현안 관련 공약과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국제 협의체 구성 등 동북아 협력과제 실천을 위한 국내외 여건 성숙에 적극 노력 《163》 《60》 《177》

V. 향후 조치사항

- 공약 추진성과를 적극 홍보하고, 부진과제 및 추가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대책 강구
- 향후 핵심공약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철저히 관리

- 각종 계기시 추진성과에 대한 적극 홍보 (각부처, 국정홍보처)
- 부진과제 및 추가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대책 (각부처, 국무조정실)
 - 소관부처의 장관 책임하에 특단의 개선노력 촉구
 - 부처간 협의·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업무 조정규정 (총리훈령)에 의거 정책분야별 조정관리 주무기관 또는 국무조정실 등에서 정책조정 (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, 청년실업대책협의회 등 활용)
- 향후 핵심공약 관리·점검 계획 (대통령비서실, 국무조정실)
 - 금번 종합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약 실천계획 변경·보완, 공약 이행 시기 조정 등 후속조치 추진
 - 향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실태 점검·평가 등 지속적인 점검·관리

수 범 사 례

① 3대 특별법 제정 (111, 124, 126 / 산자부, 행자부, 건교부, 예산처)

- 참여정부 국정목표인 「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」를 구현하기 위한 3대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토대 마련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('03.12.29)
 - 지역간 불균형 시정 및 지방정부의 자립경제 기반 마련
- 지방분권특별법('03.12.29)
 -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분권 방안 규정
- 신행정수도건설법('03.12.29)
 -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신행정수도 이전의 근거 마련

② 한·칠레 FTA 체결 및 FTA이행특별법 제정 추진

(61 / 재정부, 외교부, 농림부)

- 한·칠레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FTA 이행특별법 제정 추진
- 농민단체, 국회 등에 대해 농업개방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선대책 원칙에 따라 범정부적 지원대책 추진 및 전방위적 설득
- 한·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 통과('04.2.16) 되었으며 FTA 이행특별법은 임시국회 통과('04.3.2)

③ 국가 전염병관리 시스템 도입 (140 / 복지부)

- 해외유입 전염병의 국내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『국가 전염병관리시스템』을 도입하여 국민적 불안감 해소
 -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정밀 검역실시(89만명) 및 국립보건원, 국립검역소 등의 상호연계 체계(hot line)를 유지하여 사스 안전국가 (SARS Free Country) 실현
 - 국가질병관리 시스템을 개선키 위해 “국립보건원”을 “질병관리본부(KCDC)”로 확대 개편('04.1)

④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(40 / 노동부·산자부·중기청·법무부)

- 중소기업 인력난, 현행 외국인력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·관리체계 마련
 - 『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('03.8.16)』을 제정·공포하여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·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

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실시기반 구축(159 / 환경부)

-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조속히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조성
-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하여 산업계,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 토론회·간담회·설명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
- 『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』을 제정·공포('03.12.31)하여 사업장 배출오염 총량관리제 실시 기반 구축

⑥ IT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 발굴·육성(4 / 정통부, 산자부, 과기부)

- 글로벌 경쟁체제,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경제로 도약,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5~10년후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국가역량을 결집 추진
- 산·학·연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분야를 선정하고, 추진체계 구축
 - 10대 산업관련 49개 원천 기반기술 발굴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(과기부)
 -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조기 산업화 중심의 산업별 추진과제 도출 및 지원체제 구축(산자부)
 - 성과중심의 R&D Process 확립 및 민간 PM제도 도입(정통부)

7] 상속·증여세 완전포괄과세 도입(106 / 재경부)

-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상속·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해 완전 포괄주의 도입('03.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)
- 포괄주의가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헌법학자, 헌법연구관 등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 마련

8] 지역항만공사 설립(53 / 해수부)

- 이용자중심의 항만관리체제를 확립하여 항만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 정부관리체제를 항만공사제로 전환 추진('03.5.29 항만공사법 제정)
-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운영개시('04.1.16)
 - ※ 항만이용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항만공사내 지자체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항만위원회 설치

9]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조성(57 / 건교부)

- 항공물류산업 활성화로 국제교역량을 확대하여 인천공항을 허브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조성 추진('05개장 예정)
- 외국인근 공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단지조성 및 기반 시설공사 사업비 국고지원 확대(사업비 50%→70%)
- DHL, TNT 등 다국적 물류기업 화물터미널 유치 확정
 - ※ DHL(6,800평, 2천만달러), TNT(2,000평, 700만유로)

4대분야 및 12대 국정과제별 공약추진현황

분 야	12대 국정과제	계	추진 현황			
			완료	정상		부진
				추진	보완	
1. 경제(23)	·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	14	2	7	3	2
	·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	4	2	2	0	0
	·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	5	1	1	3	0
	계	23	5	10	6	2
2. 교육·문화 (64)	·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	16	2	11	2	1
	·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	17	4	12	1	0
	·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	31	5	23	1	2
	계	64	11	46	4	3
3. 사회·행정 (60)	· 부패없는 사회, 봉사하는 행정	25	3	15	3	4
	· 지방분권과 국가균형	21	9	10	2	0
	·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	14	3	5	3	3
	계	60	15	30	8	7
4. 통일·외교 (30)	·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	17	0	7	8	2
	·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발전	13	2	6	5	0
	계	30	2	13	13	2
총 계		177	33	99	31	14

1.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 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과학기술연구투자 확대 1. 기초과학연구투자 확대	과학기술부		○			'07하	
2. R&D 예산 지속 확대	과학기술부		○			'07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혁신, 신산업 육성 3. 200대 핵심전략기술 개발	산업자원부		○			'07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세계 최고의 IT 신기술주도 4. IT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	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		○			계속	
5. 세계최고의 디지털강국 실현	산자부,정통부		○			'07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산업 육성 및 주력기간, 부품 산업 고도화 6.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	산업자원부		○			계속	
7. 주력 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	산업자원부		○			계속	
8. 차세대 부품·소재 산업 육성	정통부,산자부		○			'04상	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비 투자확대 9.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지원	해양수산부		○			'06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활성화 인프라 및 지원 시스템 구축 10. BT, NT 등 새로운 기술분야 집중육성	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		○			계속	
<input type="checkbox"/> 이공계 사기진작 및 경쟁력있는 인력 양성 11.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확대	과학기술부	○				'03하	211개 기관 269명 추가배정 완료
12.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 단축	과학기술부	○				'03하	병역법 개정(군복무기간 : 5년→4년)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이공계 사기진작 및 경쟁력있는 인력 양성 13.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 신설	과학기술부	○				'03상	'03.2월 설치
14. 이공계대학교육및연구지원법 제정	과학기술부	○				'03하	'04.3.2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
15. 현장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인력 양성 및 인력자원의 고도화 추진	노동부,교육부		○			'07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16. R&D 특구 지정·육성	과학기술부			○		'07하	균형위에서 추진단을 구성하여 육성방안 및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식재산창출 촉진을 통한 기술혁신 지원 17.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	특허청		○			'07하	

2.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공공성 강화 18. 교원승진제도 개선	교육부		○			'05상	
19. 교육재정 지속 확충	교육부		○			'08하	
20.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 인적자원부 조직 개편	교육부		○			'04하	
21.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	교육부	○				'03상	'03.7.21 설치
22.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한 교육 행정개혁	교육부		○			'04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23. 대학의 특성화·다양화 추진	교육부		○			'07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의 자율화와 민주화 24. 사립학교법 개정	교육부		○			'04하	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 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25.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·강화	교육부		○			'05상	
26. 교사회, 학부모회 법제화	교육부		○			'05상	
27.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	교육부		○			'05상	
<input type="checkbox"/>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 구축 28. 문화재보존기금 설치	문화재청				○	계속	기금 폐지·통 폐합 추세로 입법추진 애로
<input type="checkbox"/> 선진국수준의 문화인프라, 세계 수준의 문화산업 29.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	문광부	○				'03. 7월	유치실패
30.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구성	문광부, 정통부 방송위			○		'07하	관계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방송통신구조 개편위원회 구성 지연
31. .(가칭) 방송통신위원회 설치	문광부, 정통부 방송위			○		'07하	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방안 논의 예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식정보화사회의 전면화 32.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	정부혁신·지방 분권위원회		○			'07하	
33. 정보격차 해소	정보통신부		○			계속	

3.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 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공평배분을 통한 계층통합의 실현 34. 자영업자 소득과약개선 등 보험료 공평부과	보건복지부			○		'03하	소득탈루자료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관련 법안(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) 통과 어려움 예상
<input type="checkbox"/> 남녀고용평등 실현 35. 여성채용목표제 확대실시	여성부, 노동부		○			'06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 차별해소 36. 차별시정 국가실행 계획 수립	국가인권위원회				○	'03하	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적극적 협의 및 조정작업 지연
37. 차별시정위원회 설치	국가인권위원회			○		'04상	설치지연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 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38.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	교육부				○	03하	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한 종합대책 마련 필 요
39. 사회적 차별금지 및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	국가인권위원회				○	03하	법안 마련을 위한 관 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및 협의 지연
40.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	노동부, 산자부, 중기청, 법무부	○				'03상	'03.8.16 입법완료
41.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	인사위, 행자부		○			'07상	
<input type="checkbox"/>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							
42. 협의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 의무 명시(자녀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 의무화)	법무부			○		'04상	개정대상 법령의 결정 등 제도개선 방향 결 정 지연
43. 호주제 폐지	법무부, 여성부			○		'04상	'03.11.6 국회 법사위 제 출, 계류중
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기반 조성							
44.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	여성부, 노동부 중기청		○			'07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전 국민 복지시대 개막							
45. 직장보육 및 공동육아제도 활성화	노동부, 여성부		○			'07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							
46.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 마련	여성부, 법무부	○				03하	'03.6.20 설치 완료
47. 성매매 방지법 제정	여성부, 법무부		○			'04하	

4.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 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정착							
48. 남북경제공동구역 설치	통일부			○		'07하	경제공동구역 설치를 위한 여건 미성숙
<input type="checkbox"/> 대외환경 조성							
49. DDA 협상에 적극 대비	외교부, 재경부, 산자부, 문광부, 농림부, 해수부, 정통부, 관세청, 방송위			○		계속	농업·교육 등 분야별 협상전략 재점검 및 협상관련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 노력 필요
<input type="checkbox"/>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							
50.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	외교부, 산자부		○			'07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주도적 추진							
51.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창설	산업자원부		○			'07하	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동북아경제중심 국가 52. 부산·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개발	해양수산부			○		계속	광양항 이용률 제고를 위한 포트세일즈 강화 필요
53. 항만공사법 제정	해양수산부	○				'03상	'03.5.29 제정 공포
54. 지역항만공사 설립	해양수산부	○				'04상	'04.1월 부산항만공사 설립
<input type="checkbox"/>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55.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	건설교통부			○		계속	불교계·환경단체에 대한 설득 노력과 대전·대구 도심통과 관련 지자체 협의 필요
56.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중심지로 육성	재정경제부		○			'07하	
57.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 확충	건설교통부		○			계속	
58.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조성	건설교통부		○			계속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행정수도 건설 및 수도권 균형발전 59. 수도권을 첨단 IT산업 중심지로 육성	정보통신부		○			'07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협력체제 강화 60.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	건교부,재경부			○		계속	외교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남북간 대화채널의 안정적 운영 필요

5.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개방화시대의 농어가 소득안정 61. FTA 이행특별법 제정추진	농림부	○				'03하	'04.3.2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
<input type="checkbox"/>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62.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	복지부,농림부	○				'03하	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('03.12.26) 등 제정
63.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	복지부,농림부		○			'04상	
<input type="checkbox"/> DDA협상 전략과 대책 64. WTO/FTA 협상에 따른 지원 대책 강구	농림부,해수부		○			'04하	

6.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자료 인프라의 지속적 구축 65. 소득과약 강화를 통한 조세 및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	국세청			○		'05상	과세자료 수집방법 및 서식 개선 필요
<input type="checkbox"/> 분권적 협력정치 66.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	감사원				○	'07하	헌법개정사항이므로 사회 각계 및 정치권의 충분한 검토 필요
67. 국회에 감사원 감사요청권 부여	감사원	○				'03상	'03.2 국회법 개정으로 완료
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68.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 체제 조기구축	행정자치부 (소방방재청)		○			'07하	
69. 소방 방재청 신설	행정자치부	○				'03하	'04.3.2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
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정부패 척결 70.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	법무부,부방위				○	'04상	각계의견 수렴, 부처협의 등 도입여부 신중 검토 필요
71. 공직사회 비리척결	법무부,행자부 부방위,감사원		○			계속	
72.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추진	중앙인사위원회			○		계속	공무원 보수체계 합리화, 처우개선 지속 추진 필요
73.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행사	법무부		○			'03하	
74. 돈세탁방지법의 강화	법무부,재경부		○			'07하	
75.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처벌 법규 강화	법무부		○			'07하	
76.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	법무부				○	'03하	여론을 수렴하여 도입 방안 검토
<input type="checkbox"/>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77. 식품안전기본법 제정	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청			○		'05하	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직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추진 필요
78.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	식약청,복지부		○			'04하	
79. 식품안전을 위한 거점신고 감시 체계 도입	식품의약품안전청		○			'05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재정개혁 80. 재정건전화법 제정	기획예산처				○	'03하	기존예산과 기금과의 통합문제 등에 관해 재경부와 이견으로 입법 지연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□ 지식정보화사회의 전면화 81. 정보화 확산을 통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	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		○			'07하	
□ 투명·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82.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구현	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		○			'07하	
83.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, 외부인사 참여 확대	법무부	○				'03하	검찰인사위원회규정 개정('03.7.26)
84. 각 부 장관에게 인사운영 자율권 부여 및 책임행정 강화	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		○			'07하	
85. 다면평가제 등 객관적 인사평정 기준 마련	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		○			'04하	
86. 우수인재풀의 극대화	중앙인사위원회		○			'04상	
87. 인사행정 기능의 정비	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		○			'04하	
□ 행정 개혁 88.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	기획예산처		○			'04하	
89. 정부조직 개편 및 정부기능 효율화	정부혁신·지방분권위원회		○			'04하	

7.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□ 5대차별 해소 90.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	노동부			○		'04하	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조속 마련 필요
□ 노사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91.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	노동부	○				'03하	'04.3.2 임시국회에서 「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」 국회 통과
□ 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92. 산별교섭의 효율적 정착	노동부			○		'03하	관련 시행령 개정 지연
93. 주5일제 조기정착으로 생산성 향상	노동부		○			'03하	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
□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지원 94. 주5일근무제 시행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도입 지원 확대	재경부, 중기청, 노동부	○				'03하	조세특례제한법 개정('03.12.9)

8.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 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□ 경제시스템의 개혁 95. 언론산업 선진화	문광부				○	계속	정간법 문광위 계류 중
96. 신문판매시장 정상화	공정거래위원회			○		'03상	'03.5.23 「신문판매고시 개정」, 거래질서 확립 지속추진 필요
97.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 도입	재경부, 법무부	○				'03하	입법완료('03.12.22)
98. 통합도산법 제정	법무부				○	'03하	'03.6 국회 법사위 상정, 관련단체와 이해관계 대립 국회계류중 ※ 다만,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국회 통과
□ 금융개혁 99.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	재정경제부		○			계속	
100. 재벌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	재경부, 공정위		○			'04하	
101.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	재경부, 공정위		○			'04하	
102.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	재정경제부		○			계속	
□ 기업개혁 103.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	재경부, 금감위		○			'04상	
104.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	공정거래위원회			○		'03하	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지속 조사, 시정 추진 필요
105. 과도한 접대비 지출 관행 개선	국세청		○			'03하	
□ 세제개혁 106. 상속·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적극 도입	재정경제부	○				'03하	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('03.12.9)
□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107. 상호출자·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 총액제한 제도 유지	공정거래위원회		○			계속	
108.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	재경부			○		'07하	기업부담완화 및 소송남발가능성 보완 방안 관련 관계부처 설득 및 이해당사자간 이견조정 필요

9.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109. 호남고속철도 신설	건설교통부		○			계속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행정수도 건설 및 수도권 균형발 전 110.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담 추진 기구 설치	건설교통부	○				'03상	'03.4.17 규정마련 및 설치
111. 신행정수도 건설	신행정수도 건설기획단		○			계속	
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112.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	교육부, 산자부			○		'07하	예산확보 필요
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113.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 강화	산업자원부		○			'07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114.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	교육부	○				'04상	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근거 마련
115. 지역별 대학의 연계체제 강화	교육부		○			'03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재정 확충 116.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마련	재정경제부, 행정자치부		○			'05하	
117.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	행정자치부	○				'04하	'04.1.29 공포(05년부터 시행)
118.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수확충	행정자치부		○			'07하	
119. 지방양여금 확대 및 개선	행정자치부	○				'04하	지방양여금제도 폐지 '04.1.29 공포(05년부터 시행)
120. 지방재정발전위원회 설치	행정자치부	○				'04하	지방분권특별법에 근거 마련('03.12.29)
121. 자치경찰제 도입	행자부,경찰청		○			'05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분권 촉진 122. 주민소환제 도입	행정자치부		○			'05하	
123. 주민투표제 도입	행정자치부	○				'05하	주민투표법제정('03.12.29)
124. 지방분권특별법 제정	행정자치부	○				'03하	입법완료('03.12.29)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125. 수도권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 정비	건설교통부		○			'04상	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 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□ 지역균형 발전 126.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	산자부, 기획예산처	○				'03하	입법완료('03.12.29)
127.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	기획예산처	○				'03하	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마련('03.12.29)
128. 기업 지방이전 촉진	건교부,산자부			○		계속	추진실적 미흡, 지원 대책 보완 필요
□ 지역전략산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129. 산업클러스터 활성화	산업자원부		○			'07하	

10.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 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□ 물류비즈니스중심 국가를 위한기반 구축 130.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	건설교통부	○				'03하	'03.9.29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방수로 우선 건설후 운하사업 은 경제성 재검토 용 역후 추진 결정
□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통합 131. 250만개 일자리창출	노동부		○			'07하	
□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132. 40세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압,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	보건복지부		○			계속	
133. 5대암 정기검진서비스 전국민 제공	보건복지부		○			'04상	
□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134.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	보건복지부			○		'06하	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정부의 적정부담 필요
135. 건강보험재정통합 유지·보완	보건복지부	○				'03하	지역·직장 건강보험의 통합완료('03.7.1)
136.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	보건복지부		○			'04하	
137. 의료수가 및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	보건복지부		○			'06상	
138.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	보건복지부		○			'04상	
□ 전 국민 건강 보장체계의 실현 139.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	보건복지부		○			'04상	
140. 국가전염병 관리시스템 도입	보건복지부		○			'04상	

과 제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141.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	보건복지부		○			'07하	
142.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	보건복지부		○			'07하	
143. 응급센터 인프라 확충	보건복지부		○			'07하	
144. 의료분쟁조정법 제정	보건복지부				○	'03하	우선 복지부에서 정부안을 마련토록하고 국조실에서 이견조정 필요
□ 전 국민 복지시대 개막							
145. 저소득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 지원, 차등보육료제 시행	여성부		○			'07하	
146.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	보건복지부		○			'05하	
147. 국민연금재정안정화	보건복지부				○	'04상	
148.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	보건복지부		○			'07하	
149.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	보건복지부		○			'04하	
150. 대통령직속 고령사회 대책기구 설치	보건복지부	○				'03하	기획단 내에 「인구·고령사회 대책 지원반」 설치완료('03.10.24)
151. 만 5세아동의 무상보육 및 교육의 확대	교육부,여성부		○			'07하	
152. 방과후 교육 활성화 및 보육 서비스 확충	교육부,복지부		○			'04상	
153.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	보건복지부		○			'07하	
154. 차상위계층(의료급여)시행	보건복지부		○			'07하	
155. 참여복지5개년 계획 실천	보건복지부	○				'03하	계획안 국무회의 심의의결('04.1월)
□ 주택가격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							
156. 투기수요억제대책의 지속적 추진	건설교통부		○			계속	
157. 주택자금 지원 강화	건교부,재경부		○			계속	
158. 주택공급 확대	건설교통부		○			'07하	
□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							
159.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실시 기반 구축	환경부		○			'06하	
160. 지속가능발전위 위상강화	환경부	○				'03하	위원회 규정개정('03.11.11)

11.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

과 세 명	주관부처	완료	추진중		부진	조치시한	비 고
			정상	보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							
161.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남북관광 교류 확대	통일부		○			계속	
162. 개성공단 건설 실현	통일부		○			계속	
163.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	통일부			○		'04하	적극적 남북 대화 필요
164. 국민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추진	통일부		○			'07하	
165.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추진	통일부			○		'07하	북핵문제 등과 연관, 북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지연
166. 한반도 평화선언 실현	통일부			○		'07하	"
167.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	통일부			○		'07하	"
168. 남북경제공동체 계획 수립	통일부			○		'07하	"
169.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방송교류 활성화	통일부, 방송위원회			○		'07하	방송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추진 필요
170. 남북간 방송기술 교류 지원	통일부, 방송위원회			○		'07하	북측에 방송장비 설치협조 필요(산자부, 미국등)
171. 남북합의사항 실천을 통한 남북 상호간 신뢰증진	통일부		○			계속	
172.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 해결	통일부		○			계속	
<input type="checkbox"/> 당당한 상호 협력 외교							
173. SOFA 개정 및 운영체계 개선	법무부,외교부		○			'07하	
<input type="checkbox"/>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							
174.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	통일부,국방부			○		계속	북핵문제등과 연관,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회담추진 애로
175.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 해결	통일부,외교부				○	'03하	여건조성 미비
176. 북한 핵문제 해결	통일부,외교부				○	'03하	남북한 대화 및 주변국가와의 적극적 외교노력 지속 필요
<input type="checkbox"/>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							
177.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주도	외교부,통일부		○			'07하	

